무페의 급진 민주주의 사상 - 이보경

1. 들어가면서

무페와 라클라우가 1985년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Hegemony & Socialist Strategy*>(이하, <전략>)에서 마르크스주의에서 포스트마르크스주의로의 전회를 선언한지 20년이 넘었다. 이들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노선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사상을 반대하면서, 반본질주의, 정치주의, 급진 민주주의 사상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탈마르크스주의라고 할 수 있다. 1993년에 나온 무페의 <정치적인 것의 귀환>(이하, <귀환>)은 <전략>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좀더 실천적 차원에서 자신의 급진 민주주의 사상을 제출한 책이다.

<전략>은 도서출판 터에서 <사회변혁과 헤게모니>라는 이름으로 1990년에 번역 출판되어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었으나 절판되었고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에서 새로 번역 중이라고 한다. 지금은 그 책이 국역본으로 출판된 당시에 비해 관심이 많이 줄었으나, 현재 한국 사회에 번역 소개되고 있는 탈근대론적 정치사상가들-지젝, 바디유, 아감벤, 네그리, 랑시에르, 데리다 등-의 이론적 작업에 비추어 그들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의 사상 간에 마주침과 어긋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은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탈근대론적 해체를 선구적으로 시도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치적인 것의 귀환>의 이론적 토대인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의 핵심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정치적인 것의 귀환>의 주요 개념만 검토하려고 한다. 아울러 무페의 사상이 다른 탈근대적 정치 철학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리고 그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무페의 급진 민주주의 사상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성찰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지평을 제공해줄 수 있다.

1. <정치적인 것의 귀환>의 이론적 토대인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의 주요 개념
— 헤게모니, 언어이론과 탈근대담론 —

1) 헤게모니 개념의 제출

<전략>의 헤게모니 개념은 한 마디로, 마르크스의 토대결정론(경제결정론)을 해체하고 정치영역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개념이다. <전략>은 그러한 헤게모니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헤게모니 개념의 계보학(1장)을 검토한다. <전략>에 따르면, 원래 헤게모니 개념은 "그 특정 정체성 속에서 새로운 관계 유형을 정의하려고 출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의 연쇄 속에 열려 있었던 하나의 틈새hiatus를 메우려고 출현한 것이다."(국역 17) 다시 말해, 제2인터내셔널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즉 역사적 필연성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적 이론과 정치적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헤게모니 개념, 즉 우연성의 논리가 확장되어 나갔으며, 무페와 라클라우는 이 분석 과정에서 자신들의 헤게모니 이론을 제출한다. 그들이 검토하는 이론가들은 크게 보아, 로자 룩셈부르크, 카우츠키, 베른슈타인, 생디칼리스트인 소렐이다.

먼저, 제2인터내셔널 정통이론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카우츠키는 경제적 토대의 필연적 법칙에 의해 계급통일성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계급의 현상 의식과 역사적 사명 사이의 확장된 간격이 정치적 개입에 의해 메꾸어지기 때문에 이론적 역할이 증대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개입을 정초하는 이론이 필연적이고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의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론에 의한 매개에 의존해서 분석하면 할수록 결정론적이고 경제주의적으로 되어버린다.(국역 36-37)

무페와 라클라우는 오히려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생주의(spontaneism) 개념에 헤게모니 개념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본다. 그녀의 자생주의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이 필연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어서 평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닌 채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혁명 과정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노동계급의 통일을 위한 재구성은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그런데 각각의 고립된 투쟁은 문자적 의미로만 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혁명적 상황에서 각각의 투쟁은 자신의 문자성(literality)을 범람시켜 체계에 저항하는 더 포괄적인 투쟁의 단순한 계기를 대중의 의식 속에서 재현하는데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적 상황에서 모든 동원은 혁명과정 전체를 재현하는 총체화의 효과를 낳으며, 그 효과는 하나의 투쟁에 의한 다른 투쟁의 과잉결정 속에서 가시화된다. 그것은 기의에 의한 기표의 범람 현상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계급통일성은 상징적인 통일성이다.(국역, 21-22)

무페와 라클라우는 로자 룩셈부르크 분석의 의의가,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나 정치적 지도력이 해낼 수 있는 모든 통제와 계획의 잠재능력을 파열시키는 지점까지 주체 위치들(적대의 위치들과 투쟁 형태들)을 증대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투쟁들을 통일하는 구체적 기제로서 상징적 과잉결정을 제시했다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녀가 여전히 계급주체의 범주에 머물러 있어서, 자신의 자생주의 논리에서는 주체 유형이 불확정적인 것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계급은 경제적 범주이지만 계급통일성을 보장해줄 경제적(객관적) 조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투쟁을 통해 계급위치의 통일성이 구현된다. 따라서 자생주의 논리와 필연성의 논리를 구별되는 실정적 원리로 보아야 하는데, 로자는 양자의 결과를 서로 한정하는 식으로 상호작용할 뿐인 반정립적 논리로 보았다는 것이다.(국역 23) 하지만 그들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론으로부터 파편화의 경험 및 다양한 투쟁들과 주체위치들간의 접합이 지닌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맥락, 즉 필연성의 범주가 철회되는 것을 목도하는 정치-담론의 세계에서 헤게모니 개념이 사회주의적인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국역 24-25)

무페와 라클라우는 경제적 결정론과 환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카우츠키와는 달리, 윤리적 주체의 자율성을 이유로 결정론과 단절하려했던 베른슈타인이 오히려 정치의 자율적 공간을 상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본다.(국역 49-50) 하지만 그 역시 "경제적 필연성으로부터 부단히 자유로와지는 인간성의 상승을 이룩하는 새로운 선험적 주체"를 설정하여 진전한다는 점진주의적 전략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기에, 그에게 여러 요구들은 여러 세력들의 불안정한 접합에 의존한 정치적 문제일 수 없으며 따라서 접합과 헤게모니 이론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이 무페와 라클라우의 분석이다. 그들은 베른슈타인으로부터, 노동 계급의 성장하는 경제력, 사회적 입법에서의 진정, 자본주의의 '인간화'가 노동계급을 '국민화'하였기에, 노동계급은 이제 단순히 프롤레타리아인 것만은 아니고 시민이기도 하다는 강력한 함축을 얻어낸다. 그렇다면, 즉, 노동자가 더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시민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문화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복수의 위치들에 참여하고 있다면, 나아가 이러한 여러 위치들의 총체가 더는 하나의 '진보의 법칙'에 의해 통일되지 않는다면, 이들간의 관계는 주어진 형식만을 채택하기만 하면 선험적인 보장 따위는 전혀 없는 개방된 접합을 이루게 되며 모순적이며 서로간에 중립적인 주체 위치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헤게모니 이론의 핵심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국역 51-52)

마지막으로 소렐의 생디칼리즘에서 무페와 라클라우는 "필연의 연쇄에서 끊어진 고리를 대치하는 우연과 자유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연의 논리가 지닌 특수성 즉 총체화하는 효과들이 구성되는 새로운 지형의 특수성에 대해 생각하려는 노력"을 발견한다.(국역 53) 소렐의 급진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합리주의를 대안적 진화론적 관점으로 대치하려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와는 달리, 합리적 기초라는 총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국역 55쪽) 또한 소렐은 마르크스주의가 분투하면서 지키고 있던 주체위치들을 분산화와 파편화로 이르게 한 주요한 범죄자를 민주주의로 파악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소렐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분리를 복원하고 노동계급을 통일적 주체로 재구성하고자 정치투쟁을 거부하고 총파업이라는 생디칼리즘적 신화를 승인하게 되며 이후 그람시에게 영향을 주었다.(국역 56-58)

이제 그람시로 넘어가보자. 그람시에게 헤게모니란 하나의 관계라기보다는 두 개의 매우 상이한 관계 사이의 긴장이 지배하는 하나의 공간이며, 그 두 개의 관계는 a) 헤게모니화된 과업과 그것의 자연적 계급 작인의 관계, b) 헤게모니화된 과업과 그것을 헤게모니화한 계급의 관계이다.(국역 70) 그람시에서 이러한 헤게모니적 재구성의 영역은 사회주

의의 정치적 실천이 민주주의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될 가능성을 가져온다. 만일 헤게모니가 없다면 사회주의의 실천은 노동계급의 요구와 이해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국역 79쪽) 결국 사회주의의 정치적 실천과 민주주의적 과업 사이의 항구적 접합이 헤게모니 이론에서는 중요해진다.(국역 79쪽) 사실 인민적인 것과 민주주의적인 것은 대중투쟁의 수준에서는 손에 잡을 수 있는 실체일 수 있겠지만, 엄밀한 계급귀속을 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헤게모니 이론의 정치적 성격이 분명해진다.(국역 83쪽)

특히 그람시는 헤게모니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커다란 기여를 했다. 첫째, 그가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을 주장하면서, '관념들의 체계' 나 사회적 행위자들의 '허위의식' 과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 즉 이데올로기를 단지 상부구조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 그에 따라 이데올로기는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전체이며 제도와 기구들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제도와 기구들은 다양한 기본적인 접합 원칙들을 둘러싸고 역사적 블록을 함께 구성한다. 둘째, 그람시에게 정치적 주체는 엄격히 말해 계급들이 아니라 복합적인 집합 의지라는 것, 마찬가지로 헤게모니계급이 접합시킨 이데올로기적 요소들도 필연적인 계급귀속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국역 89쪽)

하지만 무페와 라클라우에 따르면 그람시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이원론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다. 그람시에게서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은 접합적 실천을 통해 달성되는 단순한 관계적 정체성밖에 가직 있지 못하다하더라도 모든 헤게모니 구성체에는 항상 어떤 단일한 통합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며 그것은 오직 기본 계급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람시에게서 사회 질서의 두 가지 원칙(통합 원칙의 단일성, 그것의 필연적인 계급성)은 헤게모니 투쟁의 우연적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모든 투쟁이 발생하는 필연적인 구조적 틀이다. 그런데 경제가 헤게모니적 재구성을 위한 사회의 잠재적 가능성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존재하는 한 그것은 또한 경제적 공간의 구성 논리가 그 자체 헤게모니적이 아님을 얘기하는 것이다.(국역 91쪽)

그러나, 무페와 라클라우에 따르면 경제라는 공간은 그 자체 정치적 공간으로 구조화되며, 그 다음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처럼 그곳에서도 우리가 헤게모니적이라고 특징지웠던 실천들이 작동하고 있다.(국역 99) 무페와 라클라우에 따르면 로자 룩셈부르크에서 그람시에 이르기까지 헤게모니 개념사에서 실제로는 정치 영역의 복합성과 독자성을 선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경제결정론은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알튀세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무페와 라클라우는 토대의 법칙(필연)과 정치의 법칙(우연)은 완전히 구분되는 두 영역이며 정치의 법칙은 토대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주의를 해체한다.

2) 알튀세르, 언어이론, 탈근대담론

라클라우와 무페에 따르면 사회적인 것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과잉결정된다고 하는 알튀세르 진술의 가장 심오한 잠재적 의미는 사회적인 것이 상징적 질서로 구성된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우선 과잉결정이론이란 헤겔의 총체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언어학과 정신분석학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헤겔의 총체성 개념이 차이들을 본질의 자기전개 과정 속의 필연적인 매개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실재적인 것을 개념으로 환원시키는데 반해, 알튀세의 과잉결정이론은 상징적인 것을 이차적이고 파생적 의미작용의 수준으로 만드는 궁극적인 문자적 의미를 고정시킬 가능성이 애초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관계들의 과잉결정된 성격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접합개념을 정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처럼 보였다. 사회와 사회적 행위자들은 어떠한 본질도 결여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규칙성들은 일정한 질서의 확립을 수반하는 고정화의 관계적이고 불확실한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니 말이다. 하지만 알튀세르가 최종 심급에서는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토대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과잉결정이론과 양립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본질주의와 제대로 단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알튀세르의 결정적 한계라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의 많은 탈근대정치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다).(국역 122-125)

또한 그들은 언어로 이루어지는 담론 영역의 물질성, 초월적인 기의의 부재 속에서 무한한 기표 연쇄가 의미를 부분적으로 고정시킬 뿐이라는 것, 담론 구성체 이론, 등의 하이데거 ·소쉬르 ·비트겐슈타인에서 시작되어 라깡과 푸코와 데리다로 이어지는 탈근대담론의 언어적 전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결과적으로 주체는 미리 결정된 선험적 주체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접합될 뿐인 주체 위치들이 되며 그것은 헤게모니적 접합 결과에 다름 아니다. 계급이

론의 포기 대신 다양하고 분산되고 고립된 투쟁들의 접합이 민주주의적 등가 원칙 하에 접합하면서 급진 민주주의의 원동력을 형성한다.

2. <정치적인 것의 귀환>의 주요 작업들: 정치적인 것의 개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무페의 비판, 민주주의의 역설, 급진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1) 정치적인 것

무페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에 대한 해체라는 성과 위에서 자유주의가 지닌 본질주의를 해체하는데도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 핵심적이라고 본다.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페가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적인 것'란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적대의 차원이며 제거불가능하다. 반면에 '정치'란 일련의 관행들과 제도들로서, 그것을 통해 정치적인 것이 제공하는 갈등가능성의 맥락 속에서 인간 공존을 조직화를 통해 하나의 질서를 창출한다.(*On The Political*, 8-9, 랑시에르의 폴리스와 정치의 구별과 유사) 다시 말해 정치는 창출된 제도나 질서이고 정치적인 것은 그 이전에 다양한 적대들이 공존 접합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제도로서의 정치만 생각하지 정치적인 것을 전혀 포착해내지 못하며, 자유로운 토론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기에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를 필연적 경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정치적인 것'은 무페가 슈미트로부터 받아들인 개념이다. 슈미트에 따르면 적대는 여러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제거불가능한 것이다. 슈미트에 따르면 심지어 보편적인 인간적 평등이 잘 설정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외국인이나 이방인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의 범주가 존재하고 따라서 인간의 절대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렇기에 한 국가가 개인들의 보편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민족적이거나 여타의 다른 동질성의 형식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정치적 평등이 무가치해지고 정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설>, 국역 69-70) 무페는 정치적 통일성만을 자신의 사고 중심에 두는 슈미트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적 동일성의 형성 자체가 배제-포괄의 관계, 즉 우리와 그들의 구별에 기초해 있음을 지적한 슈미트의 통찰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무페는 더 나아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체계 내에서 이러한 적대의 배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히려 합의와 만장일치가 가능하다는 착각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무페의 비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로 <귀환> 2장, 3장, 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무페가 공동체주의보다는 자유주의의 편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대의 특정한 사실인 다원주의를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근대사회는 고대사회와는 달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확연히 분리된 사회이며, 하나의 공동선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동시에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원주의적인 사회이다. 따라서 하나 혹은 몇 가지 좋음을 사회 전체의 기본 선으로 놓으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생각은 사회의 다원성과 필연적으로 배치되며 민주적 투쟁들의 다양성의 접합을 위해 요구되는 정치적 언어를 전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무페는 자유주의자들과 '다원주의의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코 도달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소실점으로서의 '공동선'은 필요하다고 무페는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개인적 도덕적 선과는 구별되는 정치적 공동선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적 공동선은 말하자면, 정치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필요

한 대의에 해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앞서 말했듯이, 자유주의의 특히 본질주의적 측면, 즉 보편적 인간성의 구현을 위한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하다는 자유주의의 가상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반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무페는 어느 자유주의자도 제대로 못했던 롤즈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롤즈가 스스로를 정치적 자유주의자라고 하지만 롤즈가 생각하는 정치적 선이 사실은 도덕적 선에 가까움을 무페는 지적했던 것이고, 사실상 롤즈에게 '정치'의 차원이 부재함을 폭로했던 것이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론> 이후 자신의 작업 노선에서 자신의 사상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했던 것이다.

3) 민주주의의 역설과 급진 민주주의

그렇다면 무페의 급진 민주주의(경합적 민주주의)와 롤즈, 더 나아가 자유주의 사이에 궁극적인 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주의는 모든 문제를 토론과 합의, 그를 통한 제도의 설립을 통해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지만, 무페는 갈등과 적대의 차원이 분출되고 접합될 정치적 공간의 필연성과 의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세계 곳곳의 적대의 만연을 설명해주기도 하지만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전망'이라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큰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설립과 유지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 분산되고 다양한 주체위치들의 우연적인 접합은 언제라도 적대를 창출하며 기존 제도와 담론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을 단지 제도권 내의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자유주의의 이상은 특히나 그런 분출의 시기에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출과 접합 자체가 만들어내는 장 자체는 막으면 막을수록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법과 제도로서의 정치가 이 적대의 장에서의 각종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요구로 만들어나갈 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안정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늘 불안정하다. 새로운 요구와 제도로의 정착 과정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그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가는 것, 통치자이자 피통치자로서의 주권자들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설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걸어야 할 민주적 대의들(정치적 공동선들)이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어느 정도 수렴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사회운동의 성과는 무페의 반본질주의를 더욱 정당화시켜준다. 주로 경제투쟁으로 대변되는 계급운동만이 아닌 여성운동, 노인의 권리, 이주민의 권리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들의 권리투쟁은 그 자체로 '대중'이 '이질적 공중'임을 확인시켜준다. 문제는 이러한 투쟁들간의 접합이고 등가원칙이다. 이를테면 어떤 여성주의의 목표들은 담론의 다양성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적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급진분리주의적 ·급진민주주의적인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여성주의 정치학을 설립하려는 목표는 포기되어야 하며 다양한 구축 방식을 이해하는 식의 접근을 해야 한다.

여성문제, 노동문제, 환경파괴, 인간의 소비자로의 전락, 이주 노동자 문제 등은 등가적으로 접합되어 자본에 저항하는 공동 전선을 산출하거나 민주주의의 심화를 요구하는 공동전선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수행의 주체 형성이 가능하다. 마치 이번 촛불 정국의 주체가 촛불소녀로 상징화될 수 있듯이 말이다. 경제평등의 요구는 매우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투쟁들과의 접합을 통해 나타나며 그 요구는 주로 민주사회주의의 이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의의와 한계 : 새로운 좌파 이념의 제출이라는 긍정성. 불충분한 이론적 과제들(다른 좌파 진영 정치 철학자들과의 관계).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출발해서 급진민주주의자로서 스스로를 정립하기까지 무페 혹은 라클라우는 좌파담론 역사를 주

도하고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전략>에서는 주로 탈근대담론과 언어이론의 성과를 가지고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의 담론의 역사를 고찰했고 포스트마르크스주의를 제출했다. <귀환>에서는 주로 영미자유주의자들, 칼 슈미트, 보비오와 맥퍼슨 등의 사상과 대결하면서 자신의 급진 민주주의 사상을 제출했다.

이후 <민주주의의 역설(2000)>에서는 하버마스나 롤즈 등의 심의민주주의자(deliberative democrats)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다원주의의 사실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과 그의 이론적 지주인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사실은 좌파적 기획에서 이탈한 자본투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전체적으로 보아 제거불가능한 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그 역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장선상에서 좌파 기획을 가다듬을 것을 제출한다.

<정치적인 것에 대하여(2005)>에서는 민주주의의 갈등적 성격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면서, 적대적 모델을 넘어서서 이론을 정립하려는 울리히 벡 등의 입장과 코스모폴리탄주의에 기반한 네그리 등의 입장을 비판한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이론적인 면에서는 <전략>과 <귀환>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이론을 좌파 정치 철학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론적 일관성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자신의 이론을 일관되게 좌파적 기획으로 위치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무페 이론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무페는 자신의 '다원주의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 로티나 자유주의자의 '다원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급진화', '갈등과 적대를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실체적 함축을 지니는지 모호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또 평등의 추구를 통한 경제 민주화, 자유와 권리의 인정,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의 공존과 권리 인정 등, 급진 민주주의가 내세울 수 있는 여러 요구나 지향들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노선에 비하면 색다른 것일지 모르나, 현대 사회의 통상적인 민주적 요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다른 탈근대론자들과 비교해보아도 분명하다. 크게 보아 같은 정치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발리바르는 '대중의 역설'에 대한 해명을 통해 대중의 혁명적이면서도 반혁명적인 성격을 깊이 있게 밝혀내려 한다. 또 랑시에르는 '몫이 없는 자의 몫'이라는 개념의 정식화를 통해 정치가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대결임을 분명히 했다. 또 주권 이전에 배제된 자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생명정치를 모색하는 아감벤, 다중의 역동성을 이론 속에서 포착해내려는 네그리도 있다. 민주주의의 등가원칙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지젝도 있다. 도래할 민주주의의 메시아성과 약속의 성격을 강조하는 데리다도 또한 있다.

이들과 무페 사이의 수렴과 긴장 지점을 밝혀내려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확인, 각자가 가진 한계들을 읽어내는 작업 등은 정치 철학을 더욱 풍성히하고 실천적 지침에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